
“자전거정책, 국가가 나서라 국회토론회(안)

1 행사개요

- 주 제: “자전거활성화를 막는 자전거 법 개선위한 국회토론회”
- 일 시: 2024년 11월 14일. 14시~16시 10분 (약 130분 소요 예정)
- 장 소: 국회의원회관 3 세미나실
- 공동주최: 박정현의원실·정성호의원실·이연주의원실·문진석의원실·정준호의원실
사)대한교통학회·사)한국자전거정책연합·사)한국도시설계학회
- 주 관: 사)한국자전거정책연합(www.kcycling.kr)

2 자전거;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

- 기후위기는 먼 나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. 9월에 열대야를 경험했고 가을에 벚꽃을 보았습니다.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RE100, CBAM, CCA로 대표되는 경제 및 생존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.
-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톤당 거래가격은 우리나라가 약 9,100원, 유럽은 10만 2천 원입니다. 탄소에 대한 정책의 차이이자 탄소 경쟁력지수입니다.
- 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가장 효율이 좋은 탄소저감 수단입니다. 그러나,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. 우리나라 자전거의 수단분담률은 2021년 기준 1.2%입니다. 지극히 낮습니다. OECD내 꼴찌 수준이고 인도, 중국, 베트남보다 낮습니다. 자전거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 대비됩니다.
- 자전거인구는 약 1500만명입니다. 자전거타기가 불편하고 위험해도 이용잠재력은 매우 높습니다. 시민들의 탄소민감도와 실천의지 또한 높습니다.
- 탄소중립이 국가적인 과제라면 자전거정책은 당연히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합니다. 지방사무로 분류된 자전거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부활해야 합니다.
-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전거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용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. 또한, 실질적인 자전거활성화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.
- 자전거이용자 분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.

3 주요 정책 요구 내용

문제점	개선 방안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기차 1,000만~2,000만 원 지원 vs 자전거 지원은 전무 2. RE100, CBAM 등 탄소 시대에 대한 자전거 활성화 대책 전무 3. 자전거 관련 예산 미미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선진국 수준 자전거 구입 지원 -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, 출퇴근 지원금 등 2. RE100, CBAM 등 자전거 활용 탄소배출권 시스템 구축 - 자전거등록 및 마일리지 활용 시스템 3. 자전거 예산을 최소 자전거 분담률 수준까지 확대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전거법 : 국가책무 부재 - 자전거사무를 지방사무로 인식 - 위원회, 전담조직, 국가계획수립 의무 부재 2.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의 보행권과 상충 3. 유명무실한 자전거주차장 설치 규정 : 보관, 도난 문제 심각 - 자동차 대수로 자전거주차면 수 파악 4. 부실한 자전거 시설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자전거법 개정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책무 신설 - 국가자전거활성화위원회 설치 - 중앙정부 자전거 관련 전담조직 확대 - 국가자전거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2. 자전거도로 명칭 및 종류 재검토 -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폐지 등 3. 자전거주차면 수 및 시설 설치 기준 개정 - 주차원단위법과 같은 객관적 수요추정 필요 4. 자전거 시설 지침 및 매뉴얼 정비 - 자전거도로망 완성도 제고 및 시설 변경 구간의 연속성 유지와 불편 개선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헌법상 이동권의 하위 규정인 교통 기본권 규정 부재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교통기본법 제정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통부문 최상위 법률인 교통기본법 제정 - 기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충돌회피 위한 안전거리 확보 규정 미비 2. 자전거횡단도 설치 의무 부재 3. 불합리한 자전거도로 통행의무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도로교통법 개정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전거 통행권 확보 및 강화 - 추월 시 안전간격 규정 명시 2. 자전거횡단도 설치 의무화 3. 자전거도로 통행의무 유연화

4 프로그램 (안)

시간	분량	내용	
13:50~ 14:00	(10´)	사회 : 한연환, 한국자전거정책연합 사무국장	
14:00~ 14:20	(20´)	개회	개회사 이재영 한국자전거정책연합 회장
			환영사 박정현 국회의원 정진혁 사)대한교통학회 회장 박태원 사)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
			축사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문진석 국회의원 정준호 국회의원 황정아
14:20~ 14:30	(10´)	사진 촬영	
14:30~ 15:10	(40´)	발제	발제1 기후위기 솔루션으로서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국가책무 이재영, 대한교통학회 자전거교통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
			발제2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경옥,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
15:10~ 16:00	(50´)	토론	좌장 박태원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
			토론자 전우훈,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남궁지희, 건축공간연구원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장 김종석, 자전거타기전국연합 회장 김희수, (주)라이트브라더스 대표 양근서, 전)안산도시공사 사장 신기동, 행정안전부 새마을발전협력과장
16:00~ 16:10	(10´)	폐회 (10´)	사회 : 한연환, 한국자전거정책연합 사무국장

사전참가신청 : <https://forms.gle/cBPv23Vy4cjB97FX9>

문의 : 한국자전거정책연합(010-2698-8772, kbf2022@naver.com)